

세계화를 지향하는 북한, 미래를 선도할 편찬사업회의 과제

글 박현선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현재 북한은 천지개벽할 정도로 변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스타일과 국가운영체계가 달라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권력 계승 직후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2012.4.15)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폐회사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설사 몸이 찢기고 쓰러진다’ 해도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2016.5.9)라는 구호처럼 인민을 위해 복무하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았다. 이에 김 위원장은 2017년 신년사에서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다”며 올해는 분발하겠다고 다짐했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향해 나가는 북한

과거 흠결 없는 최고 존엄으로 인민들의 추앙을 받는 지도자 상이 그려졌다면, 이제 젊은 김 위원장은 자아비판 속에 인민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는 섬김의 지도자로 나서고 있다. 그가 인민을 위해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부강국·강성국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북한에서는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이라 부른다. 국가 비전으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이 제시되고, 비전 실현을 위해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제발전 전략은 과학과 교육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경공업→중공업→정보화’로의 순차적 발전 방식으로는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기에 4차 산업으로 바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다. 북한은 “새 세기 산업혁명에 미래가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을 꾀한다. 바로 IT, 바이오산업, 나노과학 등의 4차 산업을 담당할 과학기술 인재를 교육으로 육성하자는 것이다. 이는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는 전략적 구호에 잘 드러난다.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북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다시 말해 북한을 읽는 핵심어(키워드)는 바로 ‘과학화’와 ‘세계화’이다. 과학화는 모든 것을 수치화, 정보화하는 것과 연결되고, 세계화는 국제기준에 맞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가 30여 년 전 북한연구를 시작할 때 가장 곤혹스러운 것인 북한이 경제성과를 ‘전년 대비 두 배 성장’ 혹은 ‘계획 대비 150퍼센트 초과달성’이라고 발표하는 것이었다.

그랬던 북한이 이제는 전 영역에서 계량화·정보화·과학화에 힘쓰고,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고심한다. 모든 시스템을 ‘자료기지화(데이터베이스화)’하는 노력과 함께 특허와 국제상표 출원 등 글로벌 경제에 대비하고 있다. 실제 송도원, 대동강맥주공장, 봉학식품공장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등록을 마쳐 국제상표를 획득했다. 문화적으로도 ‘비물질민족유산(남측의 무형문화재에 해당) 중 아리랑, 김치 만들기, 씨름 등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한반도에 부는 변화의 바람

지금 북한은 세계를 향해 비약을 꿈꾸고 있다. 북한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개선을 시작으로 그 도전을 실현하고자 한다. 현시점에만 집중하면 북핵 문제나 남북 관계가 답보상태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1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있었고, 올해 들어 2월 28일 하노이 북미회담이 합의 없이 끝났지만 6월 30일 판문점에서 최초의 남북미정상 회동과 북미정상



회담이 열렸다. 2년여 동안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향한 물줄기가 열린 것이다. 향후 북미실무협상과 남북미 정상 간의 협의에 따라 ‘북한체제 안전보장’이 가시화된다면, 전 영역에서의 남북교류협력이 재개될 것이다.

유산 보존을 넘어 교류협력시대를 선도해야 할 편찬사업회

북한이 바뀌고, 한반도가 변하면 편찬사업회도 달라져야 한다. 편찬사업회의 목적은 북측과 《겨레말큰사전》을 공동으로 편찬하여 민족의 언어 유산을 발굴·집대성하고 보존·발전시켜 남북언어통합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편찬사업회가 출범할 때와 상황이 바뀌었다. 유산의 복원만으로는 통합을 준비할 수 없다. 남북통합은 교류협력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 남북통합 전에 교류협력으로 상호신뢰가 형성되어야 남북이 통합에 합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시대, 평화시대에 걸맞게 편찬사업회가 거듭나야 한다. 이에 편찬사업회에는 두 가지의 과제가 제기된다.

우선 언어통합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동시에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제기되는 용어의 혼란을 정리하고, 언어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소통할 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은 요원한 것처럼 보이나 어느 날 남북한이 함께 군사훈련을 할 때, ‘지능형손전화기에 통보문’을 보내라고 인민무력성의 소좌가 말했다고 ‘스마트폰에 문자’를 보내라고 우리 군의 소위가 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작업을 편찬사업회가 해야 한다. 이미 편찬사업회는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 언어 시리즈’로 남북한의 생활용어와 어휘 등 3권의 책자를 발간했다. 보다 본격적으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 전담조직은 언어통합 사업을 확장하여 ‘언어문화통합’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어문화란 ‘언어 및 문화’를 의미하며, 문화의 개념도 유물과 대비되는 광의의 개념이다. 인간의 모든 활동이 언어를 토대로 이뤄지기에 편찬사업회는 남북 언어뿐 아니라 언어로 이뤄지는 모든 문화 활동의 통합과 관련한 사업을 해야 한다. 이러한 남북언어문화통합 사업이 본격화될 때, 오랜 염원인 편찬사업회의 상설화가 보다 현실화될 것이다.

남북언어문화통합 사업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이 필요


편찬사업회는 남북언어문화통합을 선도하는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물론 편찬사업회는 언어 분야에서 북한과 직접 교류를 이어온 유일한 기관으로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난관이 많다. 편찬사업회 내부에서 기존 사전 편찬사업에만 치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



고, 외부에서 남북언어문화통합 사업은 국책연구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반대도 존재한다.

필자는 이러한 논란을 점검해보기 위해 북한·통일 관련 연구 및 사업기관을 조사했다. 국책연구기관은 통일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의 12개소,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은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인천연구원, 고양시정연구원, 경남연구원 등의 5개소, 금융권 기관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의 6개소, 민간기관으로는 세종연구소(북한연구센터),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남북협력처 북한센터), 현대경제연구원(통일경제센터), 삼정KPMG(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주택도시연구실), 중앙일보(통일문화연구소), JTBC(남북교류추진단) 등 8개소에 달한다. 이외에도 많지만, 독립조직과 인력·예산이 확보되어 활동이 활발한 기관만을 제시한 것이다.

국책기관·지자체·민간 등 각기 관심 영역을 중심으로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며 활동하고 있다. 더욱이 통일·북한만 연구하는 유일한 국책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있지만, 통일연구원은 '통일과 북한은 우리 영역이니 다른 기관들은 연구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는다. 국책기관이나 민간기관 모두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연구와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민관협업과 융합학문이 대세인 요즘, 학문적·사업적 독점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편찬사업회 구성원들은 훌륭한 '언어과학자'이자 '언어사업가'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언어문화통합 분야를 융합하여 자신의 영역을 확장한다면 미래를 개척하는 선구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편찬사업회 구성원들은 장기적 비전을 갖고 남북언어문화통합 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을 믿고 나가기를 희망한다. 



박현선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졸업(사회학박사), 통일부 자체평가위원, 남북정상회담 대통령 자문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자문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통일교육위원회 위원장,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이사, (사)미래전략연구원 평화통일전략센터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